
**2013 북태평양 북극해 컨퍼런스
(North Pacific Arctic Conference) 성과 및 전망**

Honolulu, Hawaii, 21-23 August, 2013



2013. 9. 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 회의를 목적

- 급속한 북극지역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지구적인 관심 증대 현상에 대한 북태평양 중심의 국제석학들의 진단과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의 장을 아국 주도로 제공
-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등 새로운 북극해 정책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 평가 및 정책적 합의 도출
- 한·중·일 등 태평양 북극해 연안국의 정책방향 분석과 실질협력방안 모색
- 북극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체와의 지속적인 연계 확보방안 모색

□ 이번 회의의 특성

- 비즈니스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북극해 아젠다에 대한 본격 논의 실시
 - 해운 및 물류, 석유 및 가스 개발, 수산업 가능성 등에 대한 자유토론 개최
 - IMO POLAR CODE 담당자 참여
- 지역사회 및 환경전문가의 시각에 대한 이해 확대
 - 처음으로 원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WWF 등 참석
 - 미국 및 캐나다의 지방정부 관계자의 참석 확대를 통한 지역인식 파악
 - 덴마크 의원 등 주요 의사결정 관계자 참석
- 새로운 북극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전망 시도
 - Arctic Circle 등 새로운 협의체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 및 전망
- 한국 측 참석자 다변화 및 정책 소개
 - KMI, KIOST/MOERI 등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대우해양조선, 가스공사, KBS 등 참여 확대
 - 북극종합정책 추진계획 반영 및 관계기관 사전 설명
- 2012년에 이어 지속적인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고 북극이사회 등과 연계되는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8개국 50여명의 전문가 참석, SAO 대표단 제공 및 활동실적 홍보 예정
- 한·중·일 간의 협력체계 구축 협의
 - 연구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NPAC 연계방안 구체화 추진 합의
- 발표 및 지정토론은 최소화하고 자유토론 및 상호토론을 최대한 확보하여 논의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포맷의 시도

□ 세부 프로그램 개요

SESSION I. 미래의 북극 상업, 비즈니스와 산업

Sub-session I-1: 북극해 해운 및 물류

- 좌장 : Lawson Brigham, 알래스카 주립대 교수(PAME의 AMSA 보고서 책임자)
- 발표자 : Bjorn Gunnarsson, 노르웨이 CHNL 사장(정보센터 운영 책임자)

<토론자>

- Heike Deggim, IMO 해양기술팀장(Polar Code 담당자)
- Martin Robards, 알래스카 Arctic Beringia Program 위원장
- Denise Michels, 알래스카 Nome 시장
- Arild Moe, 노르웨이 프리쵸프 난센연구소 부소장
- Lawson Brigham, 알래스카 주립대 교수
- Xu Hua, 중국 수운과학연구소 연구원
- Toshiyuki Kano, 일본 해상안전연구소 부장(INSROP 쇄빙선 개발 책임자)
- 권오익, 대우해양조선 상무(야말 LNG사업 총 책임자)
- 이성우, KMI 국제물류연구실장

Sub-session I-2: 북극해에서의 국제 해양협력

- 좌장 : Robert Corell, 미국 Global Environment and Technology Foundation 회장
- 발표자 : Lawson Brigham, 알래스카 주립대 교수

<토론자>

- David A. Vaughn, 미국 태평양 Coast Guard 연락담당관
- Jiayu Bai, 중국해양대 교수
- Kiyoshi NAKASHIMA, 일본 OCDI 주임연구원
- 김종덕, KMI 연구위원

SESSION II. 북극해 석유 및 가스 개발

- 좌장 : 김윤형, 한국외국어대학 명예교수, EWC 연구위원

<토론자>

- Lucian Pugliaresi, 미 에너지정책연구재단 회장
- Fereidun Fesharaki, 미 FACTS Global Energy 회장
- Arild Moe, 노르웨이 프리쵸프 난센연구소 부소장
- Alexander Shestakov, 캐나다 WWF Global Arctic Programme 소장
- Kang Wu, EWC 연구위원
- 이성민, 한국가스공사 자원기술연구센터장

SESSION III. 북극해 수산업

- 좌장 : Bernard Funston, 법률 컨설턴트(캐나다 극지위원회 위원장)

- 발표자 : Harald Loeng, 노르웨이 해양연구소 소장

<토론자>

- David VanderZwaag, 캐나다 달하우지대학 교수
- Henry Huntington, 알래스카 Pew 자선재단 과학국장

SESSION IV. 재생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 좌장 : Oran Young,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 발표자 : Duane Smith, 캐나다 Inuit Circumpolar Council 회장
- 발표자 : Sarah Olsvig, 덴마크 그린란드 국회의원
- 발표자 : Edward Itta, 미 북극연구위원회 위원장

SESSION V. 북극해 해양 거버넌스 혁신

- 좌장 : David VanderZwaag, 캐나다 달하우지대학 교수
- 발표자 : Oran Young,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토론자>

- Robert Corell, 미국 Global Environment and Technology Foundation 회장
- Bernard Funston, 캐나다 극지위원회 위원장
- Kai Sun, 중국해양대 교수
- Fujio OHNISHI, 일본 일본대학 교수
- 김성진, 한국 前해양수산부 장관

SESSION VI. 결론 및 향후 추진방안

- 좌장 : Nancy D. Lewis, EWC 부소장
- 발표자 : Oran Young,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토론자>

- 참석자 전원



□ 주요 논의내용

SESSION I. THE FUTURE OF ARCTIC MARITIME SHIPPING

<Sub-session I-1: Arctic Marine Operations and Shipping Logistics>

1. NSR 현재와 전망

- 한 가지 매우 확실한 점은 NSR은 현실이며, 러시아정부가 NSR을 통해 북극자원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로 공급하기 위한 자국항로로 이용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임
- NSR을 컨테이너 운송로로 이용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태이며, 오일탱커, LNG선, 벌크선이 초기에 많이 나타날 것임
- 북극 자원운송의 증가는 자원개발과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에 따라 결정될 것임

2. 기술의 발전과 한계

- 한국을 비롯한 조선기술 선진지의 많은 조선사들은 NSR을 비롯한 북극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Polar Class 선박을 건조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
- NSR과 북극해 전체에서의 해운인프라의 부족은 큰 장애요인임(노르웨이와 북서 러시아 제외).
- 북극해에서의 수로정보는 크게 제한되고 있음. 7-8% 수준의 북극해 해양환경에 대한 정보가 국제항행기준에 적합함. NSR과 NWP 모두 제한된 항로에서만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 부족한 핵심 인프라에는 통신, 항만, 구조탐색시설, 구난, 항행지원, 환경대응역량, 관측(기상, 해빙, 기후)시스템이 포함됨.
- 논의 초점은 누가 이러한 인프라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투자를 할 것인가 였음.
- 북극권 국가의 자체 투자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의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함

3. 기타 논의 결과

- 항행기간 : 연중 항행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현재의 현실적인 평가는 6개월 정도로 판단됨. 또한 6개월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서는 불명확한 실정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당분간은 Polar Class 선박의 운항이 필요함

- IMO Polar Code : 결빙해역에서의 선박운항을 위한 강제성 있는 규정의 필요성에 공감함. 몇몇 항목은 IMO의 별도 협약의 부록으로 반영될 것임. 핵심적인 내용은 결빙해역 항해사에 대한 강제적인 교육인증 규정이 '선원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반영될 것임. 북극해 항행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관리에 대해서는 추후 IMO 프로세스에서 반영될 것임
- 연안지역사회 및 환경영향 : 지역주민의 식량안보와 북극해 활동으로 인한 연안지역에의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소음공해, 해양생물과의 충돌, 기름유출, 수렵자와 선박의 충돌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해 논의됨.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각 연안국과 해운산업계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 쇄빙선 및 독자운항선박 : 많은 Ice Class 선박들이 쇄빙선 없이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음. 러시아는 여전히 NSR항행 선박에 대해서 쇄빙선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음. NSR서쪽해역, 두딩카-무르만스크에서는 노틸스크급 선박들이 쇄빙선 지원 없이 운항 중임. 앞으로 러시아의 NSR당국이 NSR에서의 쇄빙선 지원 없는 항행을 허용할지 관심
- 국가북극전략, 자원과 NSR : 한중일은 자국의 경제유지를 위해 천연자원을 필요로 함. 예를 들어 한국은 95%의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전부를 해상운송이 담당하고 있음. NSR은 이들 국가에게 북유럽 및 러시아의 북극자원을 가져오는 대안적, 계절적 교역항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북극전략에 이 중요한 기회와 해운변화가 반영되는 것이 당연함
- 유라시아 교역의 복합운송 : 중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NSR의 대안적 루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에선 시베리아 철도, 중국발 텍시, 두딩카, 무르만스크로 이어지는 복합운송방식이 논의됨

<Sub-session I-2: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rctic Marine Transportation,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 북극 정보, 관측 및 데이터 접근 분야의 협력

- 관측 및 데이터 시스템 : 보다 종합적이고 해양과학기반의 기후 및 기상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짐. 특히 Sustaining Arctic Observing Networks (SAON)의 강화된 실천이 강조되었으며 기존의 관측 및 정보망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함으로써 범북극 관측활동이 강화되어 데이터와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점이 지적됨. 특히 산업계의 정보수집 및 확산 노력이 필

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 해상사고 정보 : 북극해에서의 사고에 대한 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일부 해운회사 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이거나 종합적이지 못하고 사유정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이 문제에 대해 해운업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통신 역량 : 기존의 경험에 의해 북극 활용에 있어서 통신 기반시설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함. 이러한 장애는 탐색 및 구난을 비롯한 안전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음

2. 양자간, 다자간 해운분야에 대한 합의

- 다국간 대화 필요성 : 보다 확대된 교류를 위해 북태평양과 북대서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여 북극해 해양문제에 있어 북극권 지역의 정부간, 북극권국가 및 비북극권국가 간의 합의를 위한 대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연안경비대(해양경찰)협력의 중요성 :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기 설치된 연안경비대 협력포럼이 몇몇 핵심적인 국제해사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들 협력이 정책, 우수사례 또는 실행수준에서 운영되는지와 일상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어떻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3. 해운분야 이유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의 범위를 확대

- 과학 및 전문연구 : 과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a) 북극해 해운문제에 있어서 use-inspired 연구를 촉진하고 (b) 전문가의 관점을 북극이사회 수준의 실천적인 협력과 연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북극연구의 역할 :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제 극지연구인 'Knowledge to Action'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북극권 의원연맹은 이를 지지하고 있음
- 과학지식의 활용 확대 : 해운업계에서 과학계 성과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해운문제에 대한 산업계의 참여방안

- 업계의 전면적인 관여 : 북극 산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캐나다가 이끄는 북극이사회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SESSION II. THE FUTURE OF ARCTIC OIL AND GAS DEVELOPMENT

1.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역할

- 국제유가가 북극 석유와 가스 개발에 있어 핵심 동인임
 - 국제유가가 100-120달러 이상이면 북극 석유와 가스개발 모두 경제성이 있음
- 북극 가스개발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음
 - 기존 가스 생산지의 신규 생산량과 새로운 생산지의 신규 생산량을 고려해 볼 때 북극의 가스 사업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
 - 두바이유가 전망에 따르면 2017년 80달러에서 2029년에는 10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극 석유개발은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LNG 사업은 20년 장기계약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극 가스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20년 후를 예상해야 함

2. 미국의 셰일가스의 영향

- 북극의 에너지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는 미국셰일가스 생산은 큰 제약이 됨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은 향후 20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하지는 않을 것임
 - 아직 셰일가스의 전 세계 매장량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음
- 기술 발전으로 셰일가스가 북극 자원개발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북극자원개발은 지연될 가능성이 큼

3. 북극의 석유 및 가스개발 운송 등에 대한 기술적 이슈

- 현재의 기술로도 북극의 기술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 다만 위험 수준은 최고 수준의 기술품질과 불필요한 중복을 요구함
- 기술자체보다는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절차와 운영시스템이 과제임
 - 예를 들어 운송기술 이외의 선박디자인 개선으로 쇄빙선 없는 운항이 확대될 수 있음

4. 기름유출 방지

- 북극 연안의 기름유출 방지와 관련하여 인프라, 기술, 경험자, 규제 등이 부족함
- WWF와 같은 NGO단체들은 이와 같이 기술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극 석유개발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5. 북극 연안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 북극 연안 석유개발은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극 연안 원주민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침
- 원주민의 생활가치를 보호하면서 에너지자원 개발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 우선 원주민 사회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원주민이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지역은 석유개발에서 제외해야함
 - 연안개발에 따른 지역사회가치 손실을 소유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야함

6. 한·중·일의 북극에너지 자원개발의 의미

-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므로 북극 에너지 자원개발은 이들 국가에 매우 중요함
- 특히 가스의 경우 많은 보유량과 장기간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자원 기반이 될 수 있음
- 중국의 경우도 북극의 에너지 자원이 향후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중요함



SESSION III. POTENTIAL ARCTIC FISHERIES

1. 북극해 어장의 가능성

- 북극해 어장은 북극 연안국들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중앙북극해 (Central Arctic Ocean, CAO)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상업성 있는 어족자원은 미발견
- CAO로의 어족자원의 이동과 향후 상업적 어업의 전망에 대해
 - 어족 자원의 이동 및 서식 조건에는 많은 변수가 있는데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지역 간의 차이라고 설명하면서 척지 해와 바렌츠 해를 사례로 들었음
 - 대서양과 CAO와의 경계인 북위 80도에서 어획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베링 해 이북의 척지 해에서는 상업적 어로활동이 제한되고 있음
- CAO로 이동하는 어종은 단지 몇 개의 어족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업적 어업의 가능성은 적음

2. 북극해 수산거버넌스

- 현재 CAO의 어업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뚜렷한 체계는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거버넌스가 제안되고 있음
 - 북극 연안 5개국도 이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어업관리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을 볼 때 북극해 어업 개발이전에 어업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임
- 북극대구와 같이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몇몇 어족자원은 북극의 해양먹이사슬에 있어 기초가 되므로 다른 해양생물자원에 있어 매우 중요함
 - 또한 해양생물자원은 특히 이누이트와 같은 북극원주민에게 매우 중요함
- 상업적 어로와는 별도로 오일&가스 개발, 해운, 심해저 탐사 등 다른 경제활동이 어족 자원과 다른 생물자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따라서 북극해(CAO)의 어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극연안국과 비 북극연안국의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함

SESSION IV. BUILDING RESILIENT COMMUNITIES IN THE ARCTIC: INUIT PERSPECTIVE



1. 북극 원주민의 동의

- 북극개발에는 북극 원주민이 소유자들이고 이들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린랜드와 같이 몇몇 경우에서 이것은 법적, 정치적 권리 확립의 문제이고 모든 경우에 인권문제와 연결됨
- 북극 원주민들이 북극 개발을 반대하지는 않음
 - 소득 증대, 인프라 설치 등 원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개발 필요하다고 인식
- 지자체와 원주민 사회의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이는 북극 개발자들이 북극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원주민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 교육 및 훈련, 세금 면제, 보호 구역 등
 - 그리고 이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규정화 하고 이러한 규정이 석유 및 가스 개발 활동에 적용이 필요함

2. 회복력의 조건

- 북극 원주민들은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날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변화는 이러한 회복력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음

- 원주민 사회 간에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육, 언어 보유, 육지와 연결, 운명 통제 의식, 사회적 연대 유지 등의 차이에 기인함
 - 회복력 강화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 지역 소유권, 자연자원에 대한 통제권, 교육 등
- 원주민 사회의 권리를 존중하고 회복력 강화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bottom up 접근이 필요함

SESSION V. THE REVOLUTION OF ARCTIC OCEAN GOVERNANCE

1. 상당한 동의가 이루어진 분야

- 발표자와 참석자들 가운데 상당한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 첫째, 북극 거버넌스는 북극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를 다루고,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비북극권 국가들의 참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복합체제 (regime complex)를 가진다는 점
 - 둘째, 북극 지역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북극이사회가 중요한 성과를 내었다는 점
 - 북극이사회 성과 : ①북극 탐사 및 구조 (2011) 부분과 해양 석유 유출 방책 (2013) 협약 도출, ②Arctic Marine Shipping Assessment(AMSA, 2009) 발간과 후속 조치로 IMO내에서 Polar Shipping Code 협상 진행, ③북극 주변 비즈니스 포럼 (A Circumpolar Business Forum) 설립 예정, ④블랙 탄소 배출과 과학적 연구 협력 그리고 석유 오염 방지에 대한 태스크 포스 설립, ⑤2015년 거버넌스 관련 권고안 마련 계획
 - 그러나 의무나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북극 원주민 역량강화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음
 - 셋째, 북극 이슈에 대한 다양한 포럼의 설립 : **The Arctic: Territory of Dialogue and Arctic Circle**
 - 다만 이들 포럼이 북극이사회와 절차나 과정과 경쟁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 넷째, 북극의 지역에 존재하는 북극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 : 인구 증가, 개발도상국의 중산층 확대 및 이에 따른 자원 소비수요 그리고 무역과 투자에서의 지속적인 세계화 문제 등

2. 서로 다른 관점 분야

- 다음의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번 세미나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보임
 - 첫째, 비북극권 국가에의 영향과 이익을 다루는데 있어 북극 이사회 능력

- 오란 영 교수는 북극권 국가, 비북극권 국가, 원주민 사회와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향후 대화 촉진을 위해 북극이사회 이외의 메커니즘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 Bernie Funston은 비북극권 국가에의 영향이나 이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북극이사회의 역량에 긍정적인 관점을 피력하고 최근에 6개 국가에 옵서버 지위를 부여한 것을 비북극권 국가에 대한 기회라고 주장
- 둘째, 거버넌스 원칙의 새로운 성명이나 공표가 갖는 실제적인 가치
 - 오란 영 교수는 북극의 향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담화와 일련의 거버넌스 원칙, 이를테면 평화로운 방법을 통한 분쟁의 해결, 관리 수칙, 토착민 권리 존중 등을 제안하였으나,
 - 기존의 북극이사회의 선언들을 볼 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지가 의문시되고, 새로운 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지에 대해선 의문을 보임
- 셋째, **Bioprospecting** 및 향후 상업어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의 필요성
 - 향후 bioprospecting과 상업 어업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넷째, 양자 협력의 미래 역할
 - 지금까지는 북극에서 경제 개발과 환경 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양자 협약이나 합의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였는데, 북극 문제에 대한 다자 및 양자 협력사이의 적절한 조화문제는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음

3. 가능한 향후 조치

- 포괄적인 북극 거버넌스 틀을 구축하기 위해
 - 북극해 거버넌스 포럼(Forum on Arctic Ocean Governance)의 설립,
 - 옵서버 국가와 북극 이사회 국가 전문가로 구성된 원탁회의 (a Round Table of Experts from Observer States and Arctic Council States) 창설,
 - 북극해 연구 실무그룹과 태스크 포스 설립 등이 제안되었음